

## 동아시아 3국의 근대사상 형성과 서양문명의 수용 - 그 상이성 분석을 중심으로

신연재  
정치외교학과

## Modern Thoughts and Western Civilization in East Asian Countries

Yeon-Jae Shin  
Dept. of Political Science

### 1. 머리말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아시아 3국 각각-한국, 중국, 일본-의 서양사상 수용에 관한 연구는 근자에 이르러 활기를 띠고 있으나, 정작 이들 3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각국의 전반적 정치환경과 역사를 비추어, 3국의 서양문명의 수용 과정에 내재된 특수성과 보편성을 밝혀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서양사상의 수용 및 영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에, 비교지성사적 시각을 이용하여 해답의 일단을 제공할 수 있다. 즉, 3국이 수용한 서양사상의 원본은 단수인가 또는 복수인가? 3국의 사상과 제도가 서양사상의 수용 과정에 작용하여 굴절의 강도와 형태를 지배하지 않았는가? 간접 수용의 경우 매개자에 의한 굴절은 없었는가? 수용된 경우, 수용자의 국가사상에 불가분의 일부로 내면화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외래사상으로 객체화되는가? 비교지성사적 분석 시각은 이러한 의문을 푸는데 유용하다.

### 2. 국제정치 환경

서구의 충격이 최초로 엄습한 아편전쟁 이전의 한국, 중국, 일본이 경제와 문화의 면에서 유교적 가치에 근거한 공통의 신념체계를 고수했다는 점은, 이들의 외래문명 수용 형태

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3국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체제의 부패와 사치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외무역의 필요성을 배격함으로써, 서양과의 접촉을 차단했었다. 문화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적 '중화주의'(中華主義), 그 토대 위에 부가된 일본의 인종적 정치적 특수주의 관념은, 서양과의 교류를 거부하게 만든 '이적'(夷荻) 관념을 신념 체계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했다.(Beasley, 1974 : 93) 이 결과 3국은 시기의 선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서양문명의 수용 및 국제사회에의 편입과 관련하여, 몇 단계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밟아 나아가는 보편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1 단계는 문화적 우월성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서구와의 동등한 관계 및 서양문명의 수용을 적대시하는 시기였다. 2 단계는 서양 국제정치질서를 문화적 기반과 무관하게 고립적 형태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3 단계는 기존 체제에 대한内外의 모순 누적이 국민국가로의 이행과 국제사회에의 자발적 편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서, 서양문명을 토착질서의 기반 위에서 전면적으로 수용한 시기였다.

각국이 총체적 차원에서는 유사한 대응 단계로 이행해 들어갔으나, 사회정치 체제와 함께 국제정치 환경의 상이성이 구체적 대응 형태와 시기의 차이를 유도한다. 유럽 국가들의 동아시아 진출 과정에서, 영국이 제일 먼저 중국 시장의 잠재 가치를 인식하고 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 확대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여타 열강을 견제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서구 열강의 동진이, 영국을 선두로 한 채 여타 국가가 그 뒤를 따라오는 형국으로 전개되었음도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점은 열강의 동아시아로의 팽창이 경제적 동인의 소산이었음을, 그리고 이들의 주요 이해 관계가 정치적 점령보다는 경제적 시장 확대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열강의 집중적 침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半)식민지' 상태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물론 중국 문화의 다원적 가변적 활력을 전제로 하고-를 말해 주기도 한다.

열강이 경제 발전 수준보다는 시장 규모에 주목한 결과, 중국은 그 공략의 촛점이 된다.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협소했고 지리적으로 동아시아권의 주변부에 위치했던 한·일 양국은,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중국 시장의 개방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1860년대까지 열강의 관심권에서 격리될 수 있었다.(김용구, 1990 : 222 ; 据天哲男, 1968 : 398) 한국의 개방이 늦어진 데에는 동아시아 항로의 요충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작용하기로 했다.<sup>1)</sup> 일본의 개국(1854)이, 열강이 중국에 전념하는 동안 미국에 의하여 이루어졌음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다발적 민란에 더하여, 이처럼 서구의 공략까지 가중됨으로써, 중국 정치는 체제의 유지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이 서양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그 문명과의 상호 작용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주로 여기에 있다. 반면, 일본은 서양의 직접적 간섭 없이 제도와 사상의 변화를 준비할 여유를 갖게 되어, 서양과의 접촉에 대비할 역량을 자율적으로 축적한 차이를 보여준다.<sup>2)</sup>

유교문명권이 서양 국제정치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이 동질적 반응과 함께 이질적 반응을 보인 것에서, 우리는 유교적 가치체계의 영향이 상이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인간과 국가에 관한 서계적 '예'(禮) 관념을 국제질서에 이식한 '중화'(中華) 의식은, 중국을 유교문명권의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주변'으로 양분한 바 있다. 유교적 국제정치질서에의 이 같은 편입 강도의 차이가 서구적 국제질서와, 나아가 서양문명

1) 서양 열강의 한반도 침투 시도에 관해서는 우철구, 1999 참조.

2) 이 점에서 명치유신이 외세의 위협에 대응한 변화였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Sato, 1979 : 128 ; Jansen, 1970 : 97

파의 상호 작용의 정도를 규율했던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화주의의 영향으로 내외정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전통이어서, 내란과 외환(外患)의 원인도 비도덕적이며 비효율적인 국내정치에서 찾는 것이 관례였다. 대내적으로 민란의 빈발과 대외적으로 전쟁에서의 연속적 패배로 인한 통치질서의 동요도, 서양 제국주의가 아닌 중국이 취약한 탓으로 간주하곤 했던 것이다.(Franke, 1967 : 106)

산적한 국내외 문제의 해결책으로 강조된 것이 ‘자강’(自強)을 위한 ‘내수’(內修)의 강화였다. 그것은 지배층의 ‘수신’(修身) 강화를 통한 구질서의 회복-中興-과 유교적 가치의 재강조로 귀착되었다. 지배층의 위기의식의 출처가 외부적으로 서양의 충격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유교질서의 붕괴였다는 사실은, 서양 세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서계적 국제질서를 현실과 관념의 양면에서 고수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양의 현실적 우월성을 관념의 면에서 전도시킨 중화주의의 잔존 때문에, 중국은 국제관계의 평등성에 관한 의식을 개발할 수 없었다. 중국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양의 기술-특히 군사기술-과 국제법을 미온적으로 수용했을 뿐, 그 배후에 자리잡은 사상의 가치를 간과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중화주의에 입각한 중국의 보편 제국 관념은 본래 인종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결여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민족 출신의 ‘청조’(清朝)가 정치적 조화와 복종을 확보할 목적으로 민족주의를 억제한 결과,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서구에의 현실적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Kim, 1986 : 278) 그러나 중화주의적 국제질서와 서양의 그것과의 대결에서 전자의 패배, 특히 청일전쟁에서의 패배가 위기의식을 민족주의로 고양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주권 수호 및 국가 평등의 실현이 초미의 과제로 부각된 것은 이러한 변화에 힘입은 것이었다. 19세기 말엽 개혁 지향적 지식인의 출현은 이 같은 상황 변화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들의 개혁 촉구가, 중화주의적 국제질서와 그 세계관을 초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양문명과의 다양한 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한·중의 ‘조공’(朝貢) 관계는 삼국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고려·명 관계에서 제도화되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은 이렇듯 전통적으로 중화주의적 국제질서에 순종했고, 청의 건국 이후 ‘尊明排清’의 ‘小中華主義’의식에도 불구하고 유교권 국제제도로서의 조공 관계는 유지했다.(전해종, 1970 : 37) 그러므로 유교권 국제정치질서에 편입된 정도가 강한 것이었고, 그 성격은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것은 아니다. 19세기 중엽 서양의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있었음에도, 한국의 지배층이 이러한 변화를 서양문명과의 상호 교류의 계기로 삼기는 커녕 그것에 대한 저항에 노력을 집중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2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하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지만,<sup>3)</sup> ‘내수’(內修)와 ‘쇄국 정책’을 강화하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한국은 개국 이후에도 유교적 국제정치질서로부터의 이탈과 서구적 국제정치질서로의 편입에 미온적이었던 것이다. 구질서에 기초한 신질서에의 저항이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양 국제질서의 수용이 자체되었음을 되새길 필요도 없다. 조선조가 비자발적 개국으로 서양 국제질서에 강제 편입된 이후에도 청·한 ‘종속’(宗屬)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서는 동·서

3) 서구의 다발적 공략이 초래한 조선조의 위기의식에 관해서는 민두기, 1986 참조. 1·2차 아편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완만한 대응으로 연결된 데 대하여, 原田環과 하정식은 정보 부족과 위기의식의 결여에서 그 요인을 찾았으나, 민두기는 다수의 신속한 정보 전달이 있었음을 근거로 오히려 정보 평가 능력의 한계에서 그 요인을 찾는다. 原田環, 1984 : 87 ; 하정식, 1985 : 86-94.

의 국제질서가 복잡하게 교차되는 형상이 나타난다. 신국제질서에서 차지하여야 할 위치와 구국제질서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게 된 것은,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가피한 일이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질서의 2중 구조는, 한국에 대한 제3국의 지배를 저지하면서 청한 종속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중국을 이용하여 서양의 압력을 배제하려는 한국의 의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양 국제질서에의 편입이 완료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은 서양의 압력을 극복하면서 국민국가화 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종속 관계를 극복하여 완전한 자주국가가 되어야 하는 2중 부담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은 사상적으로는 중화주의적 의식을 거부하고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방편으로, 국제관계의 평등 원리에 기초를 둔 국제법을 수용하려 했다.

그러면서도 한·중간의 ‘역관계’(力關係)를 고려하여 청에 대한 종속 관계를 약소국의 국제정치적 자주독립 전략으로 정당화했던, ‘유길준’(俞吉瀬)의 이율배반적 ‘양절체제’(兩截體制)관념에서<sup>4)</sup> 한국이 처했던 곤경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제국주의화 과정에 동반된 팽창 욕구가, 한반도를 그 분출구로 삼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은 이 점에서, 서양의 압력에만 대응하면 됐던 일본과, 그리고 유교적 국제질서의 유지와 서양의 압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던 중국과 상이한 국제정치 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이 서양발 충격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영향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이처럼 특수한 국제정치환경 때문이었다. 한국의 외래문명 수용 방식은, 이로써 서양으로부터의 직접 수용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여파를 거친 간접 수용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sup>5)</sup>

일본은 중국과는 현격한 거리를 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 빈도 및 규모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심지어 명·청 시대에는 중국과의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되기까지 하는 등, 중화주의적 국제정치나 유교로부터 구속받는 정도가 한국보다는 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은 동아시아 유교 문명권의 최외곽에 위치한 가운데, 그 혜택은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유교적 국제질서에의 편입 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에 속했다. 국제질서의 주변부에 위치한 것이 유교 문명에 대한 고립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18세기 이후 막부 시대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보편적 원리로 추상화시켜 중국적 성격을 제거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전통적 미덕을 합리화하도록 한 결과, 문화적 우월감과 자율성을 조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유교문명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회박하여, 서양의 위협이 중국에 가해진 그 것보다 완만하고 소폭적인 것이었음에도, 가장 먼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민감한 대응을 보인다.<sup>6)</sup> 그 조숙한 위기의식과 민감한 대응은, 유교권 국제질서로부터의 신속한 이탈과 서

4) 유길준은, 조선이 청과의 관계에서 ‘속국’(屬國)이 아닌 ‘증공국’(贈貢國)이라고 하여 사실상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정치질서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하면, 동시에 서양 제국과의 관계에서는 국제법에 기초를 둔 평등한 관계라고 함으로써 서구적 국제정치질서를 수용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이중의 국제정치질서를 유길준은 ‘양절체제’로 파악했다. 유길준의 양절체제론에 관해서는 유길준, 『유길준 전서』, I : 108-117 ; 김용구, 1997 : 244-261 ; 정용화, 1998 : 118-142, 하영선, 2000 : 33-34 참조.

5) 3국의 개혁사상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개화, 자강, 부국강병 개념의 수용이 대표적인 예인데, ‘開化’ 개념은 일본으로부터 自強 및 富國強兵 개념은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다. 上垣外憲一 : 3 ; 이광린, 1979 : 21-24

6) 掘天哲男, 1968 : 388. 丸山眞男은 유교문명권 구성국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결여했다고 주장한다. Maruyama, 1963 : 140-141. 그러나 韓國의 경우는 清의 전국 이후 현실의 力關係를 고려하여 형식적 사대관계는 유지하되 尊明排清 의식으로 말미암아 禮敎의 명분을 제거한 채, 共同體 관계는 유지하면서 공동체 의식

양 국제질서로의 급속한 편입으로 구체화된다.

일본은 유교적 국제정치질서에서 한·중과는 상이한 국제환경 아래 있었으나, 서구적 국제정치질서로 이행한 후에는 양국의 국제환경을 변화시킨 특수한 존재이다. 한국과 일본은 규모의 협소성, 국경의 안정성, 인종의 동질성,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양의 접촉 초기 단계에서 '저항'-쇄국 정책-과 '선별적 수용'-東道西器와 和魂洋才(또는 東道西藝)-이라는<sup>7)</sup> 대응의 공통성은, 이런 동질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수도가 해안 부근에 위치하여 서양의 군사적 위협을 지배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데다가, 국내정치의 압력과 중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서양과의 타협으로 전쟁 없는 개국 조치를 취한다. 국제정치가 '우승열패'(優勝劣敗)로 특징지워지는 힘의 각축장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한 일본은, 서양 국제정치질서에 일찍 적응해 들어갔다. 동아시아 3국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런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명치유신 이후 급속한 국민국가 건설과 산업화에 성공을 거둔 일본이 형식상으로는 조약 의무를 부담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강력정치'(強力政治)를 실행하여, 서양 국제정치질서를 양국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Watanuki, 1971 : 429-431)

"아시아의 단결을 유지하여 서양의 침략을 막으면서 선두에 서서 이를 이끄는 맹주가 필요한 바, 일본만이 맹주가 될 자격이 있을 뿐, 아직은 구태의연하고 고루함을 벗어나지 못한 한국과 중국은 도저히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자가 될 수 없으며", "오늘을 꾀하는 데 일본은 인접국들의 '개명'(開明)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일으킬 여유가 없으므로, 아시아의 대오에서 벗어나 서양 문명국과 진퇴를 같이하면서 그들이 한국 및 중국과 접촉하는 방식에 일본도 따라야 할 것"이라는 福澤諭吉의 소위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이나<sup>8)</sup>, "개화된 민족이 미개화된 민족을 점령·지배하며,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약소·미개 민족은 서서히 문명화되고, 오늘날의 개화 민족이 불필요한 인간애나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加藤弘之의 견해는(植手通有, 1983)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 점은 일본이 이미 서양사상-제국주의, 사회진화론 등-을 내면화하여 팽창주의의 합리화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서양 세력 이외에, 일본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어, 한·중 양국에 외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는, 이로써 문명의 중심과 주변이 전도됨은 물론, 일본의 압력에 의하여 한·중 양국의 국민국가 건설이 저해당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 3. 정치체제의 구조

'막부'(幕府) 시대의 일본은 정치체제, 정치적 권위, 사상의 다원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한·중 양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존재였다. 천황의 정신적 권위와 장군의 현실적 권력이 공존하는 막부의 2원적 권위 구조는, 유사시 충성의 전이를 가능하게 했고, 전통질서의 변

은 회복시키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7) 그러나 野村浩一은 張之洞의 中體西用論과 사즈마의 東道西藝論을 비교하면서 양자는 모두 전통적 윤리를 바탕으로 서구의 충격에 대응하는 유사한 면을 보여주기도 하나, 전자가 전통적 질서를 평사적으로 보강하려는 것이었던 데 반하여 후자는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양에 대한 문호의 개방을 지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野村浩一, 1964 : 85-86.

8) 福澤諭吉, “時事新報,”(1882. 3. 11), 『福澤全集』. 福澤諭吉의 이러한 脫亞論에 관해서는 今永清二, 1979 · 6장 ; 김봉진, 2000 · 102-103 참조.

화를 용이하게 한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즉, 19세기 중엽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에서 막부의 무능력이 노출되자, 무사들의 충성 대상이 각 大名-蕃主- 및 장군으로부터 천황에게로 이행된 사실 자체는, 구질서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었다.(두으스, 1988 : 39-42) 그것은 과도기의 혼란을 수습할 신권력의 수립이 점차 가능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중의 경우 군주가 정치 권위의 유일한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의 정당화 명분인 유교가 보수화 되는 경향에 따라, 배타성이 강화된 일원적 권위 구조가 정착되어 있었다.<sup>9)</sup> 권위 구조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기존의 권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권위가 결여될 수 밖에 없어서 기존의 권위에 의한 전통질서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치체제의 경우, 일본은 중앙집권제-幕府-와 지방분권제-蕃-를 혼합한 형태라고 해야 마땅하다. 중앙 정부로서의 막부는 금융, 대외무역, 군사력 및 주요 도시와 광산을 직접적인 관할하에 두면서, ‘참근’(參勤)을 의무로 과하여 大名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반면 大名은 자신의 蕃 내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장군의 권력과 천황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였다.(파일, 1986 : 34-41) 개국 이전의 일본 정치체제는, 평상시에는 막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권위의 원천들을 통합한 다원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충성 대상이 변화하면 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었다. 다원적 정치구조의 영향은 사상계에도 반영되기 마련이다. 통치사상으로서의 유교의 유일성이 박탈된 결과, 유교 사상의 변용과 비유교적 사상이 다양하게 분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양한 가치를 합리화하는 다양한 사상의 활동은, 즉 전통사상의 다기화는, 서양의 충격에 의한 정치적 격변과 외래 사상의 수용에 대하여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동인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양반 지주제가 혼합된 형태였다는 점에서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체제의 형태가 이런 것이었던 한, 말기에 다가설수록 양반 수의 증가, 관료의 충원을 둘러싼 경쟁의 첨예화 그리고 양반층의 분화가, ‘재조’(在朝) 세력과 ‘재야’(在野) 세력 사이의 치열한 권력투쟁을 야기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권력투쟁의 첨예화로 말미암아 군주와 관료의 전횡 견제라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기는 했다.(Henderson, 1968 : 120) 그러나 유교에 대한 비판 기능의 저하가 전통사상의 다기화 및 서양사상과의 상호 작용 기회를 억지한 것에서, 우리는 문제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단 탄압이 지적 혁신을 불가능하게 하고, 관료는 개혁 정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정치질서가, 지식인과 관료를 제약했다. 이들이 서양과의 접촉 초기 단계에서, 그 사상의 수용과 관련하여 소극적 내지는 배제적 태도를 취한 이유중의 일부를, 우리는 여기서 감지할 수 있다.

재조 양반 세력이 극단적 보수주의의 시각에서 유교사상을 해석하는 경향에 반발하여, 일부 재야 양반 세력이 중심이 된 ‘실학’(實學)이 등장했으나, 세도정치의 위세로 말미암아 지배적인 사상으로 부상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양반층의 특권적 지위가 농업사회 구조에 그 근거를 둔 것인 한, 그들은 상공업의 발전을 통한 사회 변동을 저지하는 세력이었다. 조선조의 경우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세기 초엽까지 상공업의 발전을 억제하되, 공업의 민간인 주도를 배제한 채 관장제 수공업 형태를 유지했다. 상업의 경우,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특권 상업의 형태로 일관했다.(강만길, 1984 : 82-87) 이 점은 일본의 경우와 대조

9) Wright, 1965 : 8-9. 이와는 달리 중앙집권적 국민국가, 중상주의적 국민경제, 국가기구 확대, 군사비 증대를 결여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구조가 유사했다는 견해로는 Moulder, 1979 : 87-90.

를 이루는 것으로서, 지방분권제 하에서 무사 계층에게 사회적 지위와 정기적 수입을 제공하는 것이 ‘번’이었기 때문에, 번의 경제와 무사의 수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번의 경제 발전이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어서, 조선조와는 달리 주자학적 윤리에 입각한 반(反)상업주의적 정향이 개발될 여지가 매우 적었다.(Sato, 1979 : 124-125) 오히려 막부와 번은 대규모 개간 사업의 시행 및 상인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 이 과정에서 상공업이 발전하여 개혁 세력의 거점이 됨으로써, 전통적 가치의 문화-예를 들면 실용주의와 합리주의 정신의 성장-와 서양사상 수용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일본의 봉건체는 내정의 모순과 서양 세력으로부터의 충격으로, 외정의 위협과 막부의 무기력성이 노출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체제 변경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내외의 위기가 가져온 충격이 정치통합의 요구로 용해되어, 1868년 이른바 ‘명치유신’(明治維新)을 계기로 정치체제의 구조가 일원화·중앙집권화되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막부 말기 이후 계속된 국가의 분열-尊皇論과 攘夷論, 公務合體運動과 討幕論-은, 이로써 천황에게 권위와 권력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해소되고, 서구적 국민국가를 지향한 개혁의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sup>10)</sup> 1868년 4월에 발표된 ‘五個條誓言’-萬機公論, 上下一體(신분제 타파), 과거의 폐습 일소, 자연법에 기초한 萬事 실행, 皇國의 기초 확립을 위한 지식의 세계적 추구-에서 드러나듯이,<sup>11)</sup> ‘명치’(明治) 초기의 개혁은 막부 시대의 유산-皇國에 내포된 國體 관념, 萬機公論에 반영된 蕃閥 연합적 성격-을 선별적으로 계승한 토대 위에서 서구화를 추진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막부 시대의 사상적 축적, 경제 발전, 사회 계층의 문화에 수반된 점진적 변화가 ‘명치’(明治) 국가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 위에서 서구화를 통로로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제의 기반 위에서 서양문명을 도입한 결과, 역사의 연속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양자의 조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Maruyama, 1963 : 140) 1880년대 말엽 보수주의의 반동이 일어날 때까지 이 문제는 미결 상태로 남겨졌다. 명치 초기 20여 년간 다양한 전통사상과 서양사상 간의 갈등은 그러한 현실의 산물이었다.

한국 및 중국의 경우, 18세기 이후 사회 계층의 문화와 민간 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이 진행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제기된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위로부터 억제됨으로써 전통사상의 다기화가 지체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서양문명의 수용과 그것과의 상호 작용이 지체됨으로써 개국이 늦어지는가 하면, 서구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의 축적이 결여되고, 개혁 지향적 사상의 개발이 제약되고 있었다. 1860년대의 일본이 기왕의 축적을 바탕으로 ‘명치유신’ 이후 서구 지향적 개혁에 착수했던 데 반하여, 같은 시기의 한국과 중국에서는 정치적 보수주의의 영향으로 개혁 세력의 존재와 요구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佐久間象山의 ‘東道西藝論’은 유교의 ‘이’(理) 사상과 서구의 자연철학을 결부시켜, 후자의 자연과학적 원리로 유교 질서를 비판하고 구질서의 개편을 주장한 것이었다.(Beasley, 1974 : 95-96) 이에 반하여 馮桂芬은 모순과 ‘자정’(自淨) 능력의 보유를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고, 중국의 전통질서를 골간으로 한 ‘서학’(西學) 수용-

10) Jansen (1970), 101-102. 이 점과 관련하여 ‘개국’은 국가의 국제사회에의 ‘개방’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자기 국기를 ‘통일국가’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丸山眞男의 개국 관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丸山眞男, 1961 : 9-10. 통일국가로 설정한다는 것은 정치적 통합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적 통합이 미숙한 상태에서 개국한 결과는 개국 이후에도 지배집단의 분열, 지배집단과 국민의 격리로内外의 위기가 가중된 동아시아 3국,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11) 「五個條誓言」의 성립 과정 및 의의에 관해서는 原口清, 1985 : 41-43.

中體西用-을 주장했다.(Cohen, 1984 : 26) 申箕善은 동양의 도덕 규범을 바탕으로 서구 과학기술의 수용-東道西器論 또는 吾道彼器論-을 주장했다.(권오영, 1984 : 122-125) 우리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구의 물질문명을 도입하려는 보수주의적 개혁사상의 한계를, 양자의 사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위로부터 좌절된 경험은 일부 지식인들의 반동을 불러 일으켜 옆으로부터의 급격한 개혁 요구를 제기하게 한다. '감신정변'과 '무술정변'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체제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된 내적 기반의 미성숙이 두 정변의 실패를 통하여 인지된 이후, 양국의 개혁사상은 점진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 '애국계몽운동'과 '변법(變法)운동'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입각한 것으로서, 기존 정치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민족적 모순과 계층적 모순에 대처하려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양대 과제의 해결책은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의 점진적 이행에서 찾아졌고, 그것은 또한 개혁의 범위와 방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권력'과 '지성'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전제군주제 하에서는 국민이 군주의 노예가 되어 개인의 활력이 국가의 부강과 자주로 연결될 수 없다는 申采浩와 梁啓超의 자유주의적이며 국가주의적인 인식,(단재 신채호 전집 간행위원회, 별집, 1977 : 216-217 ; 植手通有 1974 : 391-392 ; 梁啓超, 1978 : 28-29) 그러나 시민층 부채의 상태에서 혁명은 국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군주제를 존속시키면서 입헌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인식, 게다가 민중은 모두 무식하고 무지하며 몽매하고 방탕하여 훌륭한 정부 아래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라는 '우민관'(愚民觀)이(유길준 전서 편찬위원회, 1971 : 121) 절충된 형태로 입헌군주제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입헌공화제'가 정치체제의 한 형태로 고려되지 못한 이유가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있었음을, 그리하여 그것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음을, 여기서 간파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국가의 자주와 부강을 위해서 입헌군주제가 그 대안으로 선택되었음도 간파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국강병이 목표로서 중요했던 한, 이 시기에 유입된 자유주의, 법치주의, 사회진화론, 사회계약론 등의 서양사상은 지식인들의 사고를 구속한 국가주의에 의하여 굴절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경향은, 1890년대 이후 동아시아 3국의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과 지성이 분리된 상태에서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한국과 중국에서는 지식인이 주도하는 옆으로부터의 요구가 개혁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조광해, 1989 : 104-124) 또 그것은 문화의 변동을 수단으로 정치체제의 개혁을 시도한 결과, 점진적 성격을 내포하게 된 애국계몽운동으로 표출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권력과 지성의 일치를 바탕으로, 위로부터의 요구가 체제 개혁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대조를 보인다.

#### 4. 지배집단의 대응 방식

시장 규모의 차이 때문에, 즉 서양에게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었으나 일본은 매우 협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압력이 중국에 집중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이 이를 이른바 30여년 간의 '숨쉴 여유'(breathing space)로 이용하여,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로 전환하고 국가의 지원 아래 산업화에 성공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서구적 세계

질서에의 편입 정도가 약했던 결과, 일본은 자율적 행위 능력을 육성하여 산업자본주의 국가로의 발전이 가능했던 반면, 중국은 세계체제에 타율적으로 신속히 편입됨으로써 발전이 불가능했다는 세계체제론적 설명도 일단 가능하다.<sup>12)</sup> 그러나 이 경우 좁게는 시장 규모가, 넓게는 세계체제를 통한 서양의 압력이 중·일의 대응을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편입이 빨랐던 만큼, 중국의 대응이 일본의 그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제기됐어야 하나, 양국이 세계체제로의 편입 과정에서 보여준 대응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었다. 일본의 대응이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던 것에 비하여, 중국의 그것은 완만하고 소극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대응의 전도 현상은 서양의 충격에 대응할 국내적 개혁 기반-정치, 사회, 경제, 전통사상의 변화-의 축적과, 이것을 하부구조로 한 지배집단의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충격과 그것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 방식, 특히 지배집단의 대응 방식이 서양문명의 수용 형태를 규정한 주요 요인이라고 해야 마땅하다.<sup>13)</sup>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양의 압력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상이한 대응 양식은 각국 내부에서의 유교의 위치, 내부적 개혁 기반 구축, 개국의 성격, 그리고 지배집단의 개혁 지향성 정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18 세기 이후 일본의 제 학파는 자국 문화의 출처가 중국임을 인정하되, 동시에 외래문명의 원천이 유사 이전의 일본이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일본 문화의 보편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외래문명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유도했다. 이러한 보편성의 자각에 덧붙여, 유교의 제약 없이 고유의 미덕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특수성과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배양될 수 있었다. 이 결과 유교는 지배적인 사상이기는 하되 배타적인 통치사상의 위치를 확보할 수는 없어서, 지배층에게 권력의 합리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전통질서 하의 지배층이었던 '大名'과 '무사'(武士)가 유교를 흡수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권력과 지위는 유교가 아닌 출신과 세습에 근거한 것이었다. 한·중과는 달리 이를 기반으로 권력과 유교의 분리가 가능했고, 그리하여 상이한 문명의 침투로 인한 권력의 동요 가능성의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후 서양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이로 말미암아 그 문명을 궁정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막부 시대로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경우, 거듭된 서구의 압력과 내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그 지배적 위치를 유지했다. 그런가 하면 권력과의 합치를 바탕으로 대내적으로 통치사상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항사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유교가 비교적 강력한 형태로 잔존하는 가운데 서양문명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차이를 보여준다. 유교적 제 가치에 의존한 채 정치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반외세주의에도 투영되어, 유교적 사회 원리와 질서에 배치된다는 신념으로 말미암아 서양문명이 배척받기에 이른다. 한·중에서의 반외세주의가 문화적 일체감 및 우월감에 기초한 것이었던 한, 그것의 역할은 서양 또는 그 문명을 배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어서, 그것이 국내 문제화 되어 국내정치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Jansen, 1970 : 98-99) 아니라 국제정치 차원에서 국가의 존부 문제로 작용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문화적 우월감의 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통합과 국력 증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스로 변화하면서, 서양에 대응해야 한다는

12) Wallerstein의 세계체제이론을 동아시아사에 적용한 Moulder의 주장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Moulder, 1979 : 3-4.

13) 서구의 충격보다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특수성이 양자의 접촉 형태 및 결과를 규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인이라는 견해로는 Reischauer & Fairbank, 1960 : 670.

방향으로 반외세주의의 예봉이 집중되었다.(Beasley, 1974 : 98-99) 일본의 반외세주의의 목표가 부국강병을 통한 외세의 배척에 두어졌던 한, 그것은 1차적으로 전통질서의 유지 세력과 타파 세력간의 국내정치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개혁 지향적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변화-왕정 복고, 명치유신-를 가져온 점에서 한·중의 반외세주의와는 상이한 성격을 드러낸다.

사회 경제의 변화, 그 영향으로 인한 전통사상의 다기화, 그것에 자극받은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위’에 의하여 좌절됐거나 역이용됐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서양과의 상호 대응 과정에서 일찍부터 서양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던 데 반하여, 한·중에서는 그것이 문화적 우월감 때문에 피상적 수준에 머무른 것이 내부적 개혁 기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막부 체제하의 일본은 쇄국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제한적이나마 ‘화란’(和蘭)을 통한 서구와의 접촉 통로를 유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학’(洋學)의 원초적 형태로서 ‘란학’(蘭學)을 육성했다. 그리하여 개국을 전후한 시기의 일본은 서양의 사정을 부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사고와 태도의 재정립이 이루어져 서양문명의 수용 기반을 어느 정도 보유한 형편이었다.(Toshiaki, 1982 : 57-62 ; 마루야마 외, 2000 : 36) 魏源의 『海國圖志』가 부정확하고 무근거하다는 비판이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제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중의 경우, 정치의 보수화 경향 및 쇄국 정책 때문에 서양과의 본격적 접촉이 제약되어, 서양 지식의 수용이 저지되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서양 지식의 수용이나 심화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제한적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중국적 지식-예를 들어 西學源出於中國論-인 양 위장되어, 서양문명의 수용이 자연될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중엽 동아시아 3국의 세계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 있는 魏源의 『海國圖志』가 그러한 사정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sup>14)</sup> 그런데 ‘위원’의 설명 중에서 구미 열강의 지리와 역사에 관한 부분은 중국인의 기존 저술이나 서구인의 저술의 漢譯本을 편집한 것 이었다. 위원은 ‘유가’(儒家) 사상은 물론 ‘법가’(法家) 사상을 포용한 인물로서 ‘부국강병’을 국가 목표로 인정한 파격성을 보여 주지만,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서구의 ‘장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하여, 그 시대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Chang, 1971 : 29-30)

한국의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하여 다수의 서학 서적이 중국을 매개로 전래된 18세기 이전과는 판이하게, 19세기 전반에는 『海國圖志』와 徐繼려의 『瀛環志略』 정도가 전래되어 지식인들의 세계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였다. 서양에 대한 무지는 서구적 국제 질서의 강력정치적 하부구조를 몰각한 채 상부구조로서의 자주, 평등(平行之權), 독립, 내정 불간섭, 세력균형(均勢)만에 주목하여 국제법을 수용한 것에서도 확인된다.(김용구, 1984 : 3-5)

‘과거제’는 유교적 질서하의 관료 충원 제도이면서 지배집단으로의 진입 장치이기도 했다. 관료제 사회의 특성상 충원 경쟁이 치열했으나, 전형 방식이 ‘경학’(經學) 보다는 ‘사장’(詞章) 위주여서, 과거제는 국가 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함양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빚어냈다. 뿐만 아니라 유교의 정통에서 벗어난 사고를 배척함으로써,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과거 제도가 지식인의 사고를 구속하고 다양한 사상의 개발을 저해하여 체제 내적 사고에 안주하도록 유도한 상태에서, 개혁 지향적 사고의 제기

14) 『海國圖志』는 1844년부터 1852년에 걸쳐 100권으로 간행되었다.

나 ‘서학’(西學)의 전공은, 지식인에게는 정치적 기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구가 ‘근대’의 모습으로 동점했을 때, 그것의 이해와 그것과의 접촉에 선행되어야 할 정치 기반이 결여된 상태여서,(Craig, 1979 : 4-5) 개국과 개혁이 자체되고 서양문명의 제 측면에 대한 신속하고 다원적인 대응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이 유교문명권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개국한 것이나, 중국이 가장 먼저 개국했으면서도 서구적 국제정치질서에의 편입에 저항한 사정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19세기 말엽 한·중 지식인들의 개혁 강령에 과거제 폐지가 필수적으로 포함된 것도 그런 부작용을 간파한 때문이었다.

막부 시대 지배 집단의 최하위 체계를 구성하고 있던 하급 무사들은 도시 상인 및 ‘자영부농’(自營富農)의 성장에 따라 사회적 기반을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18세기 말엽 외국 선박의 빈번한 출몰에 직면하여, 한·중의 지배집단과는 달리 일찍부터 위기의식을 강화하고 있었다.(성황용, 1973 : 292-293) 그런 가운데 ‘和親條約’(‘神奈川條約’, 1854)과 ‘安政條約’(1858)의 비준으로 인한 ‘攘夷論’과 ‘開國論’의 대립, 이후 ‘尊皇論’(倒幕論)과 ‘公武合體論’으로 인한 상급 무사와 하급 무사 세력의 분열은, 이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개혁 요구를 증폭시킨 동인으로 작용했다. 그들은 이에 따라 내외의 정치적 격변에 직면한 상황에서, 尊皇을 위해 체제의 개혁-倒幕-을 요구하는 개혁 주도 세력으로 변신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들의 양이론은 존황론과 필수적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 체제의 유지를 위해 변혁을 요구했던 18세기의 제 학파와는 달리, 이들이 막부 체제의 모순과 패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부터, 구사상의 비판과 신사상의 정립이 동시에 추구되는 사상의 무정부 상태가 빚어지는 것이다.(河野健二, 1968 : 182) 서양의 사상, 제도, 기술은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다양하게 도입되었고, 이 결과 명치 초기 20여년간 전통사상-신도, 유교, 국학 등-과 서구사상-자유주의, 국가주의, 사회계약론, 사회진화론 등-의 제 유파간의 대립이 얹혀 통치사상이 부재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Hane, 1969) 그것은 일본의 구지배집단이 구체제를 개혁하여 국민국가 건설의 주도권을 장악하되, 신체제의 안정을 위해 구체제의 온존과 서양문명의 도입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

한·중 양국의 경우 보수 세력의 완강한 반대, 과거제로 지지된 유교적 질서의 수호 의지 및 지위 보전 욕구는 개국과 개혁에 대한 지배집단의 소극적 태도를 이끌어 낸다.(조광해, 1989 : 122) 과거의 제도와 사상이 여전히 내외정의 모순에 대응하는 주요 기반이어서 개혁과 외래사상 수용 문제는 19세기 말엽의 숙제로 넘겨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19세기 말엽에 이르면, 과거 경험에 대한 회의로 말미암아 유교적 국제질서가 아닌 서구적 국제질서 속에서 자기 위치를 규정하려는 지성계의 변화가 일어난다.(Schrecker, 1969 : 45) 그것은 내재적 요구와 외래적 충격을, 다원적인 서양사상과 분열된 전통사상을 조화시켜 해결하려 했던 소위 계몽운동으로 대변된다. 그것은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서양사상을 이해하고, 후자의 충격으로 전자가 재해석되는 동·서 사상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던 탓이었다.(Levenson, 1967 : 105-106 ; Furth, 1983 : 325)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부강한 국민국가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중화주의를 대치하고, 개혁사상의 관심은 국가의 자주와 평등의 구현에 집중된다.

## 5. 맷는말

과거에 대한 회의는 지배층의 일원으로, 사상·정치·문화의 면에서 전통질서에 정당화 명분을 제공하던 지식인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를 초래했다.(小島祐馬, 1967 : 53) 지식인의 역할 변화는 기본적으로 전통질서를 떠받쳐 온 사상과 가치에 대한 회의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제국주의적 팽창에 부수된 서양문명의 전파는 이들의 국가사상에 변화의 전기를 제공했다. 동아시아 3국과 서양 제국의 접촉이 제국주의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양자의 상대적 위상이 강약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한, 이들에게 총체로서의 서양은 다양한 문명중의 하나-이질 문명-가 아니라, 지배적·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우월 문명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양의 팽창을 계기로 비교문명사적 시각을 개발하고 전통질서에 대한 회의를 강화한 것이, 이들에게는 동아시아 근대사의 방향 전환과 변화를 추구하는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으로 대변된 근대 국민국가상(像)의 정립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전통질서의 해체를 그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에 따라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차원에서 유교적 정치질서로부터의 이탈을 촉구했거나와, 또한 서구적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점에서 제국주의를 매개체로 하여 전달된 서양의 충격이 동아시아 3국의 지식인들에게 국제정치상(像) 변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나아가서 이들의 개혁 동기를 강화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정치상의 전환은 기존 사상과 가치의 변화라는 선행 요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에 의해 제반 서양사상이 수용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존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해 온 전통사상이 '서세'(西勢)의 '동점'(東漸)으로 야기된 국가 폐망의 위기 상황에서 무기력성과 불감증을 드러내고, 국가의 생존을 위한 개혁에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변화된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국가의 생존 문제가 이들의 지배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어서,(Schwartz, 1972 : 81) 서양사상의 적극적 도입은 불가피한 대안이었다.

동아시아 3국의 서양문명 수용사는, 사상이 출처를 떠나 전파되는 과정에서 피전파자의 정치환경-객관적 조건-과 그의 의도 또는 선택-주관적 조건-에 따라 굴절될 수 있는 것임을, 그리하여 그 본질은 외면되고 형식만이 수용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사상이 본래 그것을 생산한 정치 세력의 의도와 상호 작용하는 정치환경의 산물이기는 하나, 그것이 일단 전파 과정에 들어서면 상이한 환경에서 상이한 정치 세력의 의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용되는 것이 상례이기는 하다. 서양사상이 그 출처인 구미 세계에서 담당했던 역사적 역할을 박탈당한 채, 동아시아 정치의 변화에 대응해야 했던 지식인의 필요에 맞추어, '구국' (救國)의 정치사상으로 수용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 참고 문헌

- 장만길 (1984), 『한국 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 강재언 (1985), 『한국의 근대사상』, 한길사
- 구선희 (1987), “福澤諭吉과 1880년대 한국 개화 운동,” 『사총』, 32
- 권오영 (1984), “신기선의 동도서기론 연구,” 『청계사학』, 1
- 김도형 (1986), “한말 계몽운동의 정치론 연구,” 『한국사연구』, 54
- 김봉렬 (1986), “유길준의 국권론,” 『경희사학』, 12 · 13
- 김봉진, “19세기 후반 일본의 국제화와 후쿠자와,” 하영선 외, 『국제화와 세계화 : 한국 · 중국 · 일본』(집문당, 2000)
- 김용구 (1984), “한국의 근대 국제법이론 수용에 관한 연구,” AKSE회의 발표 논문  
----- (1990), 『세계외교사』 상 · 하, 서울대 출판부  
-----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나남
- 단재 신채호 전집 간행위원회 편 (1977), 『단재 신채호 전집』, 형설출판사
- 두으스 (1988), 『일본 근대사』, 지식산업사
- 마루야마, 가토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 민두기 (1986), “19세기 후반 조선 왕조의 대외 위기 의식,” 『동방학지』, 52
- 박기서 (1987), “한일 근대 개화사상의 비교 – 변혁주체론을 중심으로,” 『박성봉 교수 회갑 기념 논총』, 경희대 출판부
- 박충석 (1979), “조선 후기에 있어서 정치사상의 전개,” 『현상과 인식』 6, 가을
- 성황용 (1973),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의 기초,” 『아세아연구』, 16-2
- 신용하 (1977), “19세기 말 한국의 개화사상,” 『한국 근대사의 재조명』, 서울대 출판부  
----- (1987), 『한국 근대 사회사상사 연구』, 일지사
- 유길준 전서 편찬위원회 편 (1971), 『유길준 전서』, 일조각
- 유영렬 (1987), “대한자강회의 신구학 절충론,” 『최영희 선생 화감 기념 한국사학 논총』, 탐 구당
- 이광린 (1989), “개화사상의 형성과 그 발전 – 실학의 전통 및 서구사상의 수용과 관련하여,” 『한국사 시민 강좌』 4, 일조각
- 이광린 (1979), 『한국 개화사상 연구』, 일조각
- 이태일, “김옥균의 개화사상에 있어서 현실성의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13집
- 전해종 (1970), 『한중관계사 연구』, 일조각
- 정명환 (1973), “이광수의 계몽사상,” 『문학과 지성』 4-1, 봄
- 정용화 (1998), 『유길준의 정치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광해 (1989), “근대국가 형성기의 정치 · 행정 개혁 비교 연구,” 『정신문화연구』, 37
- 조성환 (2000), “19세기 말-20세기 초 중국의 국제화 : 양계초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하 영선 외, 『국제화와 세계화 : 한국 · 중국 · 일본』, 집문당
- 최창규 (1977), “위정척사의 사상적 평가,” 『한국 근대사의 재조명』, 서울대 출판부
- 파일 (1986), 『근대 일본의 사회사』, 현상과 인식
- 하영선 외 (2000), 『국제화와 세계화 : 한국 · 중국 · 일본』, 집문당
- 하영선 (2000), “유길준의 문명개화론 : 전통과 근대의 복합화,” 하영선 외, 『국제화와 세계

- 화 : 한국·중국·일본』, 집문당
- 하정식 (1985), “조선 관인의 태평천국관,”『승실사학』, 3
- 古田光, 作田啓一, 生松敬三 編 (1968), 『近代日本社會思想史』I, 有斐閣  
橋川文三, 松本三之介 編 (1974), 『近代日本政治思想史』I, 有斐閣
- 掘天哲男 (1968), “清末における西洋受容についての試論,”『思想』, 525
- 今永清二 (1979), 『福澤諭吉の思想形成』, 勁草書房
- 福澤諭吉 (1959), 『福澤全集』, 岩波書店
- 上垣外憲一, 『日本留學と革命運動』, 東京大出版會
- 小島祐馬 (1967), 『中國革命の思想』, 筑摩書房
- 植手通有 編 (1983), 『西周・加藤弘之』, 日本の名著 34, 中央公論社
- 野村浩一 (1964), 『近代中國の政治と思想』, 筑摩書房
- 梁啟超 (1978), 『飲冰室文集』 전8권, 臺北 : 中華書局
- 原口清 (1985), 『日本近代國家の形成』, 岩波書店
- 原田環 (1984), “19世紀の朝鮮における對外的危機認識,”『朝鮮史研究會論文集』, 21
- 河野健二 (1968), “知識人と西洋,”古田光外 編, 『近代日本社會思想史』I, 有斐閣  
丸山眞男 (1961), 『日本の思想』, 岩波書店
- Beasley, W. G. (1974), “Self-Strengthening and Restoration : Chinese and Japanese Response to the West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Acta Asiatica*, 26
- Chang, Hao (1971), *Liang Ch'i-ch'ao and Intellectual Transition in China 1890-1907*,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Cohen, Paul A. (1984),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 Craig, Albert M. (ed.) (1979), *Japan : A Comparative View*,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Crowley, James B. (ed.) (1970), *Modern East Asia : Essays in Interpreta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Franke, Wolfgang (1967), *China and the West*, Columbia :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 Furth, Charlotte (1983), “Intellectual Change : From the Reform Movement to the May Fourth Movement, 1895-1920,” Twichett & Fairbank (ed.),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2, Part 1,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 Henderson, Gregory (1968), *Korea : The Politics of Vortex*,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Jansen, Marius B. (1965), *Changing Japanese Attitudes Toward Moderniza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1970), “The Meiji State,” in Crowley (ed.), *Modern East Asia : Essays in Interpretation*, New York : Harcourt Brace
- Kim, Samuel S. (1968), “Change and Continuity in Chinese Values,”『동아연구』7
- Levenson, Joseph R. (1958),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3 Vols,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 (1967), *Liang Ch'i-ch'ao and the Mind of Modern China*, Berkeley

- : Univ. of California Press
- Maruyama, Masao (ed.) (1963), *Thought and Behavior in Modern Japanese Thought*, London : Oxford Univ. Press
- Matsumoto, Sannosuke (1971), "The Significance of Nationalism in Modern Japanese Thought," *Journal of Asian Studies*, Vol.XXXI, No.1, November
- Moulder, Frances (1979), *Japan, China and Modern World Economy : Toward an Reinterpretation of East Asian Development, ca.1600 to ca.1918*,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Reischauer & Fairbank (1960), *East Asia : The Great Tradi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 Sato, Seizaburo (1979), "Response to the West : The Korean and Japanese Patterns," Albert M. Craig (ed.), *Japan : A Comparative View*,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Schrecker, John (1969), "Reform Movement, Nationalism, and China's Foreign Polic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XXIX, No.1, November
- Schwartz, Benjamin I. (1972), "The Limits of Tradition and Modernity as Categories of Explanation : The Case of Chinese Intellectuals," *Daedalus*, No.2
- Toshiaki, Okubo (1982), "Western Learning in Late Tokugawa Period : Humanistic and Social Studies," *Acta Asiatica*, No.42
- Watanuki, Joji (1971), "State Formation and Nation-Building in East Asia,"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23, No.3
- Wright, Mary C. (ed.) (1965),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 The T'ungchih Restoration, 1862-1874*, New York : Atheneum